

이달의 초점

## 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강희정|

2024년 소득보장 정책의 전망과 과제

|김태완·최준영|

2024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안수란|

2024년 사회보장재정 데이터 관리 정책 현안과 과제

|신정우|

2024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이소영·황남희·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24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The 2024 Outlook for Population Policy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연구위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부연구위원

한국의 인구 변동은 합계출산율의 급속한 하락, 인구의 고령화, 인구 규모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례없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2006년부터 범부처 종합 대응 5개년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4년에는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을 토대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본이 제시될 예정이다. 올해는 또한 2025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그간의 정책 성과와 평가 준비가 중요한 해이다.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 지속 가능 사회 기반을 구축하여 세대가 공존하며 초고령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1 들어가며

한국의 인구 변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례없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1983년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미만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합계출산율이 초저

출산의 기준이 되는 1.3명 미만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그동안 반등 없이 지속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020년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소위 데드크로스(dead-cross)로 불리는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다. 인구 규모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와 함께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로 인한 인구 규모의 감소는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변동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6년부터 인구 문제에 대한 5년간의 범부처 종합 대응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간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이 순차적으로 수립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2023년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과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 가능 사회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4년은 이를 토대로 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정본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인구 변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현황과 전망 결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인구 규모 변화를 개관하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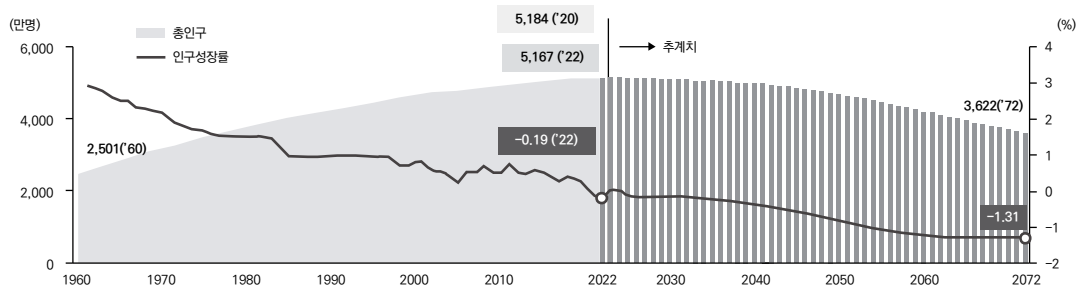
화의 주된 요인인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인구 변화는 국가 전체뿐만 아니라 지역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인구의 변화를 전 국가적인 특성과 지역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인구 변동의 현황 진단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간명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저출산 대응 정책과 고령사회 정책으로 구분하여 인구정책의 현황과 변화를 살펴보고 2024년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인구 변동의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자연 감소가 2020년 나타난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규모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에 크게 기인한다. 출생아 수의 감소와 사망자 수의 증가는 지속되고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 규모의 감소는 향후 더욱 급격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인구 규모 감소는 사회 다양한 부문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미래 사회 대응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이소영, 장인수, 이삼식, 이철희, 신손문, 신성호, ... 최용성, 2019).

저출산과 관련하여 합계출산율이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를 통해 출산 관련 변화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출산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그림 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전망(1960~2072년)



자료: 통계청. (2023. 12. 14.).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p. 1. 보도자료.

[표 1]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2021~2022년)

(단위: 15~49세 여성 1명 당 명)

구분	2021년(A)	2022년(B)	B-A
합계출산율	0.808	0.778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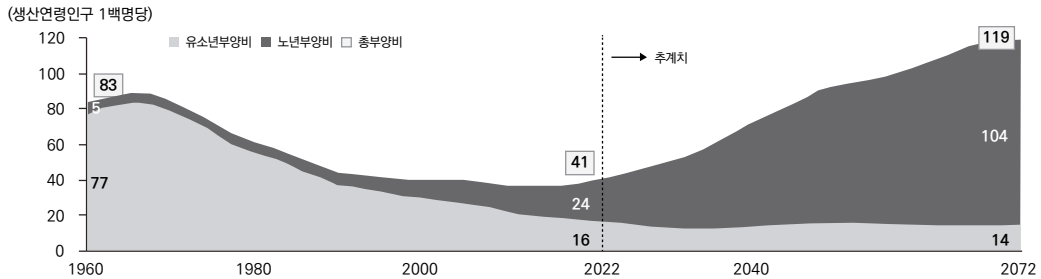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3a).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데이터파일].

가운데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년(2021~2022년) 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08명에서 0.778명으로 0.0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합계출산율 변화를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감소한 연령대가 증가한 연령대에 비하여 많은 동시에 감소폭이 증가폭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특성은 연령대별 특성이 사뭇 다르다는 점인데, 대체로 15~49세 중 25~34세 연령대 출산율의 감소가 두드러진 반면 3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23b).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2년 17.4%에서 2072년 47.7%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5세 이상 인구 비율, 85세 이상 인구 비율도 각각 2022년 7.3%에서 2072년 31.9%, 2022년 1.8%에서 2072년 14.3%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고령층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해당 연령대의 비율 변화가 보다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러한 (초)고령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체계 정비, 이와 관련된 재정 여건 진단 등은 지속적인 당면 과제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

[그림 2] 부양비(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 1960~2070년)



자료: 통계청. (2023. 12. 14.).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p. 17. 보도자료.

(초)고령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양비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8명에서 2030년 38.0명, 2040년 59.1명, 2050년 77.3명, 2060년, 90.3명, 2072년 104.2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총부양비 증가를 크게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고령인구 규모 증가와 저출산(저출생)에 따른 유소년인구 규모 및 생산연령인구 규모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 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현황과 전망

#### 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현황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4년은 2021년부터 추진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4차 연도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대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된 목표로 하여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지난 1~3차 기본계획과 차별적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개 영역 내의 20개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정부는 2022년 인구 변동으로 인한 격차 해소, 노동시장에서의 개혁을 통한 세대 공존, 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되는 성장, 수축 사회로의 전환에도 안전한 정주 여건, 인구 감소 충격 완화 등 5대 인구 전략 영역을 발표하여 저출산 대책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2022년 말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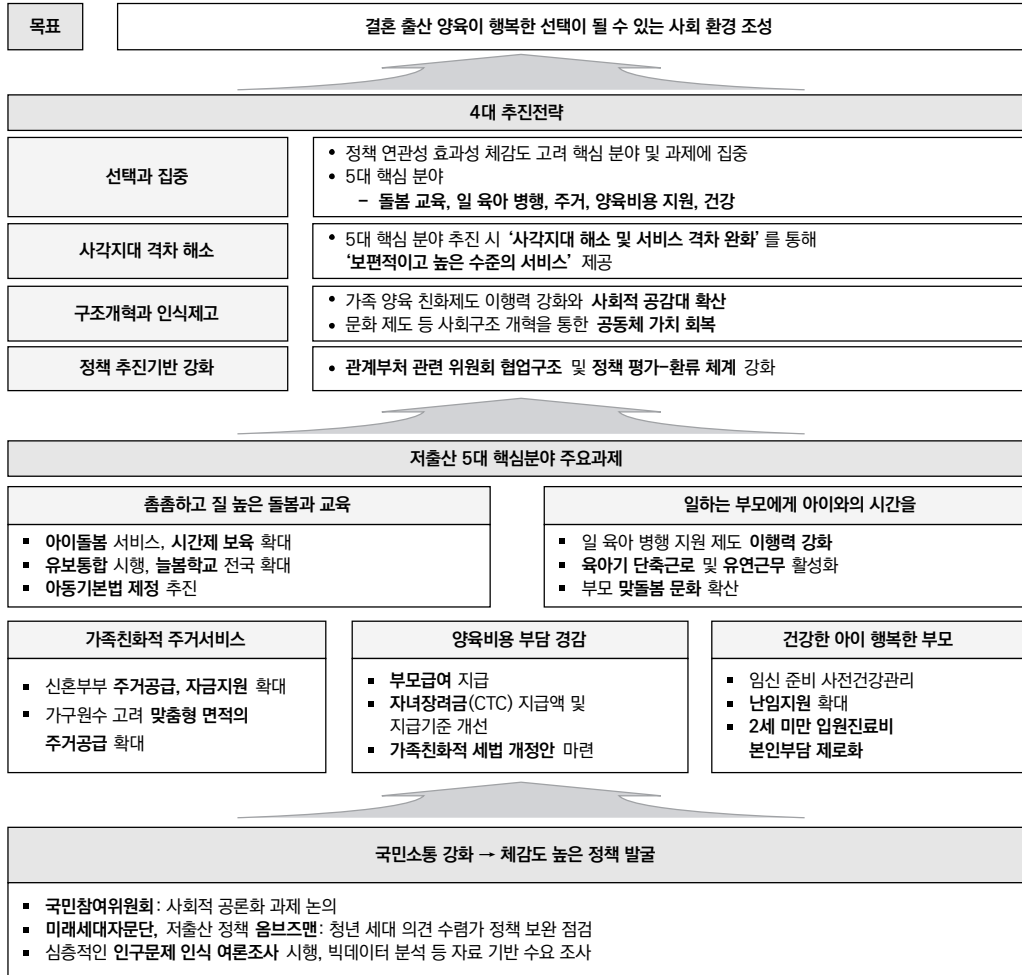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다(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2. 12. 28). 축소 사회에 대한 적응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에서는 경제 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이라는 4대 분야 내에서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외국 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학령인구 감소 적응 및 효과적 지방 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라는 6개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3년 3월 28일에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이 발표되었고, 이를 필두로 후속 정책과 관련 논의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그간의 저출산 정책이 산발적으로 도입되면서 제도적·현실적 사각지대와 이에 따른 정책 체감도 저하 문제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불명확한 목표 설정, 형식적 평가를 비롯한 정책 평가·환류 체계 부재 등 근거 기반 평가 미흡, 백화점식 과제 나열, 청년세대의 가치관 및 인식 변화 등 실수요자 요구 반영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2023년 3월 28일 발표된 저출산 정책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 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라는 4대 추진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추진 전

략별로 살펴보면 정책의 연관성·효과성·체감도를 고려하여 ‘츄츄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라는 5대 핵심 분야의 주요 과제에 집중하고, 5대 핵심 분야 추진 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양육 친화제도 이행력 강화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문화·제도 등 사회구조 개혁을 통한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관계 부처·관련 위원회 협업 구조 및 정책의 평가, 환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23년 제4차 기본계획 내에서 많은 저출산 대응 관련 과제가 이전의 정책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는 2023년에 부모급여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 정책으로 늘봄학교 운영,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아동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공립 등 공보육 확충, 유아 교육비 지원이 추진되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 추진되었고, 아동수당 지급과 함께 제도 개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지원이 신설·도입되었고, 모성 보호 육아 지원으로 육아휴직급여 정책이 추진되었다. 주거 영역에서는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 지원 확대(다가구 매입 임대 출자용자(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와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주택 구입·전세자금(융자)), 청년가구 대상 공급

[그림 3]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p. 4.

확대 및 임차 지원 등이 추진되었다. 더불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및 상환유예 등의 주요 정책이 추진되었다. 2023년 영유

아 및 아동, 청소년 및 청년, 여성, 양육 부모 등 정책 대상에 따라 추진된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는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지원, 육아 휴직급여 지원,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 금 지원, 셋째아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서비스 지원 정책의 추진 성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늘봄학교 개편,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HPV 백신접종 지원, 임신부 영아 건강 관리 시범기관 확대, 다자녀가구 임대주택 공급, 한부모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등이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3).

2023년 3월 28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이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과제들이 추진되었다. 예컨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 임신 전후·생애초기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의 과제가 구체화하여 추진되었다. 2023년 7월에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12개 과제(4개 중점 추진 과제, 8개 시기별 지원 과제)를 선정하여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중점 과제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정책 목표로 하고, 4개의 추진 전략을 포함하는 2023년 세법 개정안(2023년 8월 29일 최종 확정)을 발표하였다. 이 중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여 미래를 대비하기 위

해 결혼·출산·양육 지원, 청년 자산 형성 및 노후 대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전략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되어 있다.

## 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전망

2024년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4년 차이면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2023. 3. 28 발표)’과 부합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정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전망이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의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관련된 예산으로는 15조 4000억 원(2023. 3. 28 발표한 신규 및 보완 정책에 대한 예산안 합계로,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 예산안은 미포함)이 편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분야에서는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틈새돌봄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등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분야에서는 의료비와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난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2] 2024년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별 정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p>춤추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p>	<p>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1030개 반 → 2315개 반                      아이돌봄 지원 가구 확대                      · 현재 8만 5000명 → 11만 명                      ·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본인 부담 비용 10% 추가 지원                      돌봄수당 인상: 9630원 → 1만 110원(5% 인상)                      정원 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 보육료 추가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 중위소득 60% → 63% 이하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자녀 지원                      · 월 20만 원에서 2024년 21만 원으로 지원 단가 상향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138곳 → 168곳                      · 정서·진료 상담: 113곳 → 143곳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 이중언어 학습 지원 신규 제공                      늘봄학교 추진: 2024년 이후 17개 시·도 지역으로 시범운영 확대</p>
<p>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p>	<p>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1년 → 1년 6개월                      영아기 맞돌봄 특례(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일정 기간 급여 추가 지원) 확대                      · 특례 적용 기간: 3개월 → 6개월                      · 상한액: 최대 200만~300만 원 → 200만~450만 원                      · 연령 상향: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육아기 근로 단축 확대                      · 자녀 연령 확대: 8세 → 12세                      · 지급액 인상: 최초 5시간 → 10시간 100% 지원                      · 사용 기간 최대 24개월 → 36개월                      중소기업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 확대: 5일 → 10일                      '육아기 단축 업무 부담 지원금' 제도,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                      대체인력뱅크 확대: 3곳 → 5곳</p>
<p>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p>	<p>신생아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연 7만 가구 수준 공급: 공공분양 3만 가구, 임대 3만 가구, 민간 분양 1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 신설: 연 3만호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 시중금리 대비 1~3% 낮은 금리                      · 대출 이후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 추가 금리인하                      · 소득요건: 1억 3000만 원 이하로 확대                      청약제도 개선                      ·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 미혼 가구의 1.4배 → 2배                      · 같은 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에 대해 부부 개별 신청 가능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부 합산 가능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신청 불가 사유에서 배제                      · 민간 분양에서도 2자녀부터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p>
<p>양육비용 부담 경감</p>	<p>부모급여 인상(0~1세)                      · 0세: 70만 원 → 100만 원                      · 1세: 35만 원 → 5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확대                      ·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p>

구분	주요 내용
	세제지원 확대 · 자녀장려금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자녀 1인당 최대 1000만 원, 소득기준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 ·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부터 20만 원 지급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남녀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냉동 난자 사용 비용 지원 난임가구 출산 지원 강화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 폐지, 지원 기간 16개월 → 24개월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 3일 → 6일 ·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대상 난임치료휴가 급여(최초 2일분) 신설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소아·응급 필수 분야 인력 및 인프라 투자 증대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곳 → 12곳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12곳 → 14곳 · 휴일 및 야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45곳 신규 설립 및 운영비 지원

- 자료: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a). 저출산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안' 톺아보기.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b). 3. 28 발표 저출산 5대 핵심 과제 '24년 예산안 편성 현황. 보도참고자료.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12.22.).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저출산 정책. 정책참고자료.  
 4) 보건복지부.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저출산 정책. 정책참고자료.

주요 세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비용 지원 정책으로 부모급여 1800만 원 지원과 첫 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지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이 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돌봄과 교육 확대 정책으로서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의 정부 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격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되고 납입 한도가 확대되며 출산가구 대상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를 위한 주택자금대출로서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설되는 등 가족 친화적 주거정책이 추진될 예정

이다. 또한 부부개별신청 허용, 배우자 규제의 미 적용,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제도를 정비하고,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로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450만 원까지)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월 20만 원)을 신설하며, 인재채움뱅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2024년 4월부터 난임 여부를 검사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하고,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하며,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0%로 하고, 다둥이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의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2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24. 1.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12. 22.)

##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현황과 전망

### 가.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현황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 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23년 시행계획은 2024년 기본계획의 수정 보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과제의 안정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2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령사회 대책은 현재 고령인구에 진입한 고령층을 위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으로 소득 보장 및 고용, 보건·의료, 돌봄, 주거, 생애 말기 관련 정책, 다양한 생애주기 국민의 역량 발휘를 지원하기 위한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로 신중년의 일과 사회참여 지원 정책이 있다. 또한 고령사회 대책은 우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응’과 관련하여 사회 구조적인 접근으로 연령 통합 사회 준비,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상생 기반 구축, 고령 친화 사회로의 도약 등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23년 시행계획에서는 특히 고령사회 정책의 경우 2025년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향후 10년 동안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으로 인해 노인 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며 주요 과제를 추진하였다. 2023년 시행계획의 고령사회 대응 주요 과제는 사업 규모와 예산 증감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확대, 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이다(대한민국 정부, 2023).

한편 정부가 2023년 3월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출산에 방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고령사회 정책에 관해서도 큰 방향성과 주요 추진 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는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 가능 사회 기반 구축’을 목표로 1) 의료·돌봄 연계 혁신, 2)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3)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4)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5) 복지시스템 지속 가능성 제고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2023년 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의 방향성이기도 하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돌봄 연계 혁신’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Ageing in Place)을 보장하는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하여 기존 체계에서 큰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가돌봄서비스 확충과 지역 의료·돌봄 자원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해 향후 확산 가능한 노인 의료·돌봄 연계 모형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분절적인 노인 의료 이용을 사람 중심으로 통합관리하고, 건강 상태를 포괄하여 진단·관리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확대 지원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의료·돌봄 인력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친화마을 등 맞춤형 주거지를 공급하고 이들 주거에 돌봄서비스를 연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고령자의 특성에 맞춘 무장애 설계(Barrier free)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3~2027년 중 5000호 이상 공급하고자 한다. 고령친화마을의 경우 수도권 은퇴자, 고령자 등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되 다양한 세대별 맞춤형 주거·돌봄·일자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다부처 협력의 지역활력타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에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중장년 친화적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 한다. 또한 현재 고령자 대상 사회참여 지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신노년층의 특성에 맞춘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하고자 한다.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형성하는 신노년층은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향성에 맞춰 2023년 7월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에서는 고령친화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친화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산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별로 불충분하고 불균등한 돌봄·의료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기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그 외 생활안전,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고령자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고 분야별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복지 시스템 지속 가능성 제고’에서는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현재 복지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건강·소득 수준의 변화,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 재점검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나.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전망

2024년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재구조화한 수정본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다.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그 정책의 범위가 방대한 데 비해 2023년 3월 28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도 정책 범위와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도가 낮아서 ‘저출산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안 톺아보기’와 같이 차년도 핵심적인 정책 전망을 참조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2023년 정책별로 중장기 사업 내용을 담고 있는 종합·기본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전망을 대신하고자 한다. 2023년 7월에 발표된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2023~2027)과 2023년 8월에 발표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23년 7월에 발표된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2023~2027)에 의하면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개편과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 2023). 제3차 종합계획은 ‘노년기 일

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 건강한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을 비전으로 ‘천만 노인 시대, 노인인구 10% 수준 일자리 창출 지원’, ‘신노년세대 수요에 대응한 노인 일자리 다양성 강화’, ‘공급 혁신 및 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요 대응, 공급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수요 대응과 관련한 3가지 전략을 살펴보겠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질적 내실화를 추진하며, 노인 돌봄, 지역사회 환경 재생, 자원순환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 유형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으로 이들의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서비스형은 향후 양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유형의 비중을 2023년 9.6%에서 2027년 15%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상황이다. 민간형 일자리는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경력을 보유한 신노년층이 민간 기업에서 계속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양한 유형의 민간형 일자리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편, 노인이 희망하는 근무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 지속 발굴, 고령자 친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림 4]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 과제

비전		노년기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 건강한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만 노인시대, 노인인구 10% 수준 일자리 창출 지원</li> <li>▪ 신노년 세대 수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다양성 강화</li> <li>▪ 공급혁신 및 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li> </ul>	
전략		추진과제	
수요 대응	1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요에 대응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운영</li> <li>2 공익활동형 질적 내실화</li> </ol>
	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서비스형 비중 확대 및 제도 개편</li> <li>2 지역 문제해결 등 사회서비스 신규영역 발굴</li> <li>3 민·관 협력형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활성화</li> <li>4 참여자 직무교육 지원으로 사회서비스 공급 역량 강화</li> </ol>
	3	민간형 취·창업 지원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간기업·구직노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강화</li> <li>2 다양한 근무조건·직종의 민간일자리 활성화</li> <li>3 창업형 시장경쟁력 확보 및 자립 기반 마련</li> <li>4 비즈니스 단계별 성장지원 서비스 강화</li> <li>5 민간형 일자리 사업 개선 방향 검토</li> </ol>
공급 혁신	4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적 경제조직 등 수행기관 다변화</li> <li>2 지역 거버넌스 기반의 수행체계 활성화</li> <li>3 담당자·수행기관 등 역량 강화</li> <li>4 담당자 고용 안정성 및 처우개선</li> </ol>
기반 강화	5	안정적 제도기반 구축 및 인식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적근거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법 제정</li> <li>2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구축</li> <li>3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 추진</li> <li>4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관협력 강화</li> <li>5 참여자 및 수행기관 등 안전관리 강화</li> </ol>

자료: 보건복지부. (2023).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2023~2027). p. 11.

2023년 8월 발표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2023~2027)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1)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2) ‘빈틈없이 지원받도록’ 맞춤형 서비스 이

용 체계 마련, 3)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기관 품질 관리, 4)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재가급여’와 관련하여 충분한 재가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다양화, 통합재가서비스의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통합재가서비스기관의 경우 2023년 4월 50개 기관에서 2027년 140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

대, 방문간호 지원 기준 개선 등 의료·요양 연계 등을 통한 재가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수급자 가족 지원 확대 및 휴식제도 활성화 등의 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서비스 이용 체계’와 관련하여 수급자의 예방·사례 관리 강화,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판정체계 도입과 등급 체계 개선, 신노년층의 노년 진입을 대비한 장기요양서비스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요양 등급 체계

는 노인의 통합적인 욕구와 장기요양 필요도를 반영해 2027년까지 개선하고, 2024년 비급여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비급여 정보 비교 시스템 구축, 2025년 신규 서비스에 대한 비급여 관리 지침 추가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기요양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진입·평가·퇴출 관리 강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

[그림 5]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비전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li> <li>•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li> </ul>
주요 과제	<p><b>1.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충분한 재가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li> <li>② 의료-요양 연계 등 재가생활 기반 확충</li> <li>③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li> </ul>
	<p><b>2.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급자 등에 대한 예방·사례관리 강화</li> <li>②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판정체계 도입 및 등급체계 개선</li> <li>③ 신노년층의 진입을 대비하는 장기요양서비스 기반 마련</li> </ul>
	<p><b>3.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장기요양기관 수급관리 및 공급체계 혁신</li> <li>② 서비스 평가·관리체계 강화</li> <li>③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li> </ul>
	<p><b>4.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li> <li>② 장기요양보험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li> <li>③ 스마트 장기요양 돌봄체계 구축</li> </ul>

자료: 보건복지부. (2023),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2023~2027). p. 6.

부족 지역 중심의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진입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2027년까지 18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를 위해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인원 축소 계획 및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 경력 관리 및 근무 여건 향상 계획 발표, 감염병·노인학대 등 위기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급식 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제고, 장기요양요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 등 안정적인 자원 확보, 장기요양기관 부정행위 방지 위한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할 전망이다.

## 5 나가며

한국의 인구 변화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 전 국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 및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에 따른 총인구 감소의 고착화, 연령별 출산율 변화의 상이성에 따른 잠재적 정책 수요 변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비 증가가 전망된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로 요약되는 저출산 현상의 고착화는 여러 사회정책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적지 않게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고령화는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포함하여 세대 간 부양의 문제 및 사회보험 제도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긴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은 젊은층의 유출, 지역 간 인구 (초)고령화의 차등적 양상에 따른 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 변동 및 사회경제적 특성의 양극화 심화가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권·비대도시권 간 양극화는 인구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사회적 당면 과제로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 측면에서의 인구 변동 대응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인구 변화는 정책 수요 및 정책 추진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모니터링, 그리고 객관적 사후 평가가 필요 이루어질 필요성이 다분하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라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시작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이르렀다. 그간 인구 변동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의 방향성은 진화하였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이르러서는 국가 차원에서 인구를 경쟁력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개인 차원 삶의 질의 관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정부는 점차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변화한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판이 시행되는 첫해이다. 또한 2024년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4차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해로, 2025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그간의 정책 성과와 평가 준비가 중요한 해이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기에 인구 변화에 대응한 정책의 서비스 강화 및 품질 관리와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큰 정책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해야 한다.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것, 즉 고령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전통적 의미의 노인 돌봄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기에 한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사회적 위험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베이비붐세대와 같은 높은 교육·건강 수준을 보유한 신노년층의 등장, 신속하게 정책을 도입하고 혁신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 등 사회적 기회 요인이 있다. 이러한 기회 요인을 활용하여 초고령사회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삶의 질 제고’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라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과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구정책은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별하고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며 인구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 지속 가능 사회 기반을 구

축하여 세대가 공존하며 초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대한민국 정부. (202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 (2023).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
- 보건복지부. (2023).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2023~2027)**.
- 보건복지부. (2024. 1. 5). 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원 +  $\alpha$ ...“저출산 지원 대폭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소영, 장인수, 이삼식, 이철희, 신순문, 신성호, ... 최용성. (2019).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 정책**.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a). **저출산 5대 핵심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안’ 톺아보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b). 3.28 발표 저출산 5대 핵심과제 '24년 예산안 편성 현황. **보도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12. 22.)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저출산 정책. **정책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2. 12. 28.).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 통계청. (2023. 12. 14.).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보도자료**.
- 통계청. (2023a).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

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conn\_path=I3에서 2023. 11. 14. 인출.

통계청. (2023b).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vw\\_cd=MT\\_ZTITLE&list\\_id=A2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vw_cd=MT_ZTITLE&list_id=A2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 11. 14. 인출.

# The 2024 Outlook for Population Policy

Lee, So-Young

Hwang, Namhui

Jang, In-Soo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s demographic transition has been characterized by the unprecedented pace of the total fertility rate decline, population aging, and population decline. The government, in response, embarked in 2006 on the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which is now in its fourth iteration. The government has recently announced new policy directions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Based on these directions, the 4th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s set to undergo revisions this year. The year 2024 is also important in that, with the 5th Plan coming up next year, there is so much to do to wrap up the policies implemented under the 4th Plan and assess their outcomes. Further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re choices for happiness. Additionally, a sustainable social foundation must be built that enables people of different generations to live in solidarity, coping well with living in a country where the population is increasingly aging.